

판 읽기: 트럼프, 이란 핵 협정 그리고 미국 기업



2016년 12월 7일 Reid Whitten, Lisa Mays 작성 (“제재분야”에 실린 글)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으로 인하여 해제된 제재를 재시행하고 대이란 기업활동에 대한 특정 승인을 철회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 경제적 및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란 핵 협정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거나 완화할 여지가 있다.
- 기업은 어떠한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생소한 장면은 아닐 것이다. 상황이 못마땅하여 전체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행동, 바로 판을 엮는 것이다.

(^o^)_~ _ _ _

우리는 말로 충분히 표현이 안 될 때 이모티콘을 쓴다. 바로 이 이모티콘이야말로 치밀하게 준비된 이란 핵 협정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란 핵 협정의 시행 1 년 후(동 블로그 참조 <http://www.globaltradelawblog.com/2016/12/07/the-table-flip-trump-the-iran-nuclear-deal-and-american-business/>),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대이란 공약이 정책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지정학적, 경제적 여건에 발목이 잡혀 수그러들지 곧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판 짜기: 협정의 원래 모습

2016년 1월 16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the Joint Comprehensive Plan for Action(JCPOA) 또는 이란 핵 협정)은 이란에 대하여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했다. 제재완화는 장기간 고립된 7천 7백만명에 달하는 이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기업들에게 제공했다. 대이란 기업활동 제고 정책과 더불어 미국은 이란의 민간항공기 분야 현대화를 목표로 미국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이란 시장에 신규 항공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를 승인했다.

판은 뒤집힐 것인가? 신임 미국 대통령의 힘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이란 핵 협정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그가 당선 된다면 이 협정을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제재 완화의 발효를 위하여 자신의 행정권한을 사용한 것처럼, 트럼프 역시 그러한 조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오바마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특별지정국민(the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리스트로부터 당사자들을 삭제했다. 당선 후, 트럼프는 오바마가 거부했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중 상당 부분을 재시행할 수 있다. 이 블로그에서 이미 두 개의 약어와 한 번의 이모티콘을 사용한 관계로, 더 이상 복잡한 말로 독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다. 핵심은, 이러한 법령 중 상당 부분이 대통령 재량이나 결정 등으로 재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 트럼프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오바마가 철회한 행정명령을 본질적으로 복원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국외 계열사들로 하여금 대이란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실시권 H(General License H)의 폐기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명령방식으로 SDN 리스트에 당사자들을 명시할 수도 있다.
- 트럼프는 이란 핵 협정을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업간 계약쯤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조건들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요건이 준수될 수 없도록 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이 제풀에 나가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이란이 핵 협정에서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은 2016 년 이전의 상태로 재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제재 복원(snapback) 조항을 인용하는데 있어서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해 11 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이란은 핵 협정에 있어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를 복원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도리어 더욱 강경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
-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이란에 대해 실제로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트럼프 팀은 이란에 비핵화 제재 부과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큰 파장: 대이란 제재 재시행 여파

트럼프가 제재의 부과 또는 재시행에 대한 권한은 가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외부요인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첫째, 트럼프는 그의 행정권 하에 미국 내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고 공언한 사업가이다. 대이란 제재가 재시행되고 보잉사에 대한 면허가 실질적으로 취소된다면 미국 제조업체의 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미국 소유의 계열사들이 이란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글로벌 입지를 가진 미국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둘째, 미국의 이란 핵 협정의 철회는 이란의 사업에 우호적인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핵 협정을 철회한다고 해도, 그 타결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국가(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및 프랑스) 모두가 대이란 제재를 재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 국가는 이란이라는 잠재적 성장 시장에서 미국보다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밖의 관련자: 판이 뒤집히면 당신의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대이란 제재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계약을 파기하고 이란 내 사업을 철회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가 제재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OFAC 지침은 미국이 제재 복원 이전에 수행된 거래에 대하여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요 시사점

트럼프가 자신의 제재 정책에서 반이란을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세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불러올 잠재적 파급효과로 인하여 트럼프의 접근은 상당히 절제될 여지가 있다. 우리는 기업이 자사의 이란 관련 활동을 분명히 이해하고 2016 년과 같이 2017 년 동안 이란 내 기업활동에 대하여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관하여 한가지 분명한 점은 2017 년은 각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